

KMI 동향분석

VOL.118
2019 MAY

발간년월 2019년 5월(통권 제118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해양수산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최지연 해양수산 균형발전 연구센터 부연구위원
(jychoi@kmi.re.kr/051-797-4713)
박상우 해양수산 균형발전 연구센터 부연구위원
(swpark@kmi.re.kr/051-797-4562)
황재희 해양수산 균형발전 연구센터 전문연구원
(jhwang@kmi.re.kr/051-797-4728)
윤영준 해양수산 균형발전 연구센터 연구원
(ynunbit@kmi.re.kr/051-797-4564)
이상규 해양수산 균형발전 연구센터 연구원
(leesangkyl234@kmi.re.kr/051-797-4566)
이호림 해양수산 균형발전 연구센터 연구원
(holiml@kmi.re.kr/051-797-4720)
신진원 해양수산 균형발전 연구센터 연구원
(shinjw@kmi.re.kr/051-797-4797)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4월 29일에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과 혁신적 포용’이라는 주제로 “2019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이하, 2019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린 ‘2019 대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해양수산부, 11개 시·도 등이 참여해 해양수산 부문의 혁신적 포용에 관한 지역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는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강연을 비롯해 11개 시·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 혁신정책사례를 발표해 해양수산 부문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에 관한 전략적 연계 방향을 설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2019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의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는 중앙·지역이 함께 참여하여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둘째, 해양수산 부문이 혁신적 포용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발굴했다. 해양수산 부문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섬지역과 연안·어촌의 삶의 질 개선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섬 발전 종합비전, 생활 SOC 최저기준 마련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셋째, 중앙과 지역의 참석자들은 현장중심의 혁신사례 발굴을 통한 국가정책 수립과 지역사회의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부문에서 포용과

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KMI와 다양한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예컨대, 해상교통 문제 해결에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협업과 정책지원을 위한 공동연구가 요구됐으며, 더불어 해양쓰레기, 내수면 산업 등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KMI와 국책연구원 시도연구원 간 협동연구 등을 통한 공동실천정책 기획·이행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대토론회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한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해양수산 부문의 균형발전에 관한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진승호 기획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3대 가치-‘분권’, ‘혁신’, ‘포용’-실현을 위한 9개의 추진과제인, 균형발전프로젝트, 국가혁신클러스터, 혁신도시 시즌2, 지역발전투자협약, 생활 SOC 사업, 지역혁신거버넌스, 균형발전총괄지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접경지 균형발전, 국제협력 정책네트워크 강화에 관한 정부 정책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특히 금년부터 추진할 생활 SOC 사업은 부처별·사업별 칸막이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공공도서관, 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차장 등 다부처의 SOC 시설사업을 한 공간에 모으는 생활 SOC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제1부는 ‘혁신적 포용, 해양수산의 대도약’이란 주제로 포용성장의 정책방향, 어촌사회의 혁신적 포용성장, 상생과 혁신의 해양수산 초광역경제권 구축에 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성장 정책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현재 정부정책은 경제정책 중심에서 국민 개인의 전 생애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진정성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과 계층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통합과 빈곤극복, 기회 균등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KMI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어촌사회 혁신과 삶의 질 제고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현재 어촌사회는 농촌·도시사회에 비해 삶의 질 만족도가 낮는데, 이는 교육, 의료, 문화여가 등에 관한 생활 SOC 부족 등에 기인하고, 섬 지역의 해상교통 제약과 어업재해 고위험 등도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어촌사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에 생활 SOC 확충 정비, 어촌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 강마을 활성화 사업, 주민주도의 어촌개발, 어업재해 사전대응체계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혁신적 어촌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지연 KMI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상생과 혁신의 해양수산 초광역경제권 구축’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세계화의 진전과 저성장의 고착 등에 기인한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도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초협력 공간체계로 재편 중이고,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도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해양 초광역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의 해양수산 자원과 연안·해양지역 인프라와 산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해양수산 초광역경제권 구축과 초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해양수산 지역경쟁력 증진과 연안·해양지역의 공동번영, 다층적 협력, 해양수산의 혁신가치 창출 등 해양수산의 초협력 시너지를 최대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부는 ‘지역, 해양수산 혁신의 핵심축’이라는 주제로 11개 시·도의 혁신정책사례가 발표됐다. 양근석 전남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의 대표적 혁신정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해양 쓰레기 제로화 대책’을 발표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는 주민주도형 섬 생태자원 회복과 섬문화관광자원화 등을 위한 섬 재생사업으로, 현재 섬 관광객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 정책의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남 연안특성을 고려한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쓰레기 사전 발생 최소화과 체계적 수거 등을 위한 ‘해양쓰레기 제로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관 인천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장은 ‘해상교통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섬 만들기’를 혁신사례로 발표했다. 인천시는 섬의 열악한 접근성과 높은 여객운임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상교통요금을 육상 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섬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병철 부산 해양농수산국장은 ‘부산 수산업·어촌혁신 2030계획’을 발표했는데,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풍요로운 문화어촌 조성, 세계적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부산형 수산업·어촌혁신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박정주 충남 해양수산국장은 어촌계 고령화와 진입장벽 등을 근본적 해소를 위해 ‘어촌 고령화에 대비한 상생형 귀어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박정주 국장은 충남의 귀어정책 핵심목표는 어촌리더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어촌계 업무복지제도를 통해 귀어가구의 지속적 소득 보장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어촌계 연금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변성균 강원 환동해본부장은 강원 고유의 ‘해양·어촌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변성균 국장은 양양의 서핑 메가 조성을 통한 서핑산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한 귀어인 주도의 차별화된 해양관광·레저프로그램 개발 등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상혁 충북 농정국장은 ‘내수면에서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충북은 바다와 접해 있지는 않지만, 내수면 낚시와 어업 등에서는 지역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혁 국장은 충북 혁신사례로 농·어업의 융복합사업인 ‘아쿠아포닉스사업’을 발표했는데, 민물고기의 분비물을 식물재배의 영양분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 지역에서 양식업과 수경재배업이 동시에 가능한 것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정영권 경남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장은 ‘양식장 유기폐기물의 혁신처리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정영권 과장은 양식장의 폐사어를 미생물로 발효해 비료로 만드는 사업인 ‘양식장 유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보급’을 어업인의 자율처리수단으로 확산하고, 폐사어의 조기 감지 등을 위한 양식장의 자동화·스마트화 등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길해진 전북 농축수산식품국 해양수산정책과장은 고군산군도 고유의 지역 인프라와 어촌뉴딜 300 사업 등을 결합한 ‘고군산군도의 명품마을 만들기’를 발표했다. 길해진 과장은 도서의 명품마을 육성을 위해 마을리더와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주민밀착형 SOC 사업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우 제주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장은 전국 최초의 ‘청정제주 바다지킴이’ 제도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선진형 모델 구축’을 발표했다. 이기우 과장은 제주도의 쾌적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152명을 고용해 제주 본도와 8개 유인도에 배치해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와 함께 해안경관복원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해양환경미화원 제도로 정비해 정규직화하고 상시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민령 울산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장은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동해가스전 플랫폼과 가스 배관의 재활용과 지역주도의 부유식 해상풍력기술 개발, 민간주도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남일 경북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해양인문학적 관점에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문무대왕 선양을 통한 동해정신 확립’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동해의 인문사회적·해양과학적 가치 증진을 통한 경북의 해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경북의 5개 시·군의 특성을 살린 ‘환동해 STAR Fish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전문가 주제발표와 시·도의 혁신사례 발표에 이어 양창호 KMI원장을 좌장으로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김선기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의 열린 대담이 이루어졌다.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은 현재 시·도는 어촌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소하고 있어, 오히려 중앙 정부는 현장의 답을 국가정책으로 환원해야 하고, 새로운 해양수산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에서 활동할 인재육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둔 새로운 인재양성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은 미래 해양수산 지역사업은 지역 주도의 광역경제권 종합계획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4차 산업기술 등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혁신리더 육성이 필요하고, 혁신리더 중심의 사업기획역량 강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김선기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은 해양수산 분야는 중앙정부, 시도,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추진할 연구 주제가 다양하고, 어촌뉴딜 300과 수산혁신 2030 등과 관련한 지속적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선진사례와 지식공유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어촌현장포럼’과 같은 현장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지역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의 혁신적 포용성장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어촌지역의 안전·교육체계 개선을 통해 어촌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양창호 KMI 원장은 대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바다를 이용한 지역혁신사업으로 항만배후단지 통합 개발, 스마트항만, 수산식품산업, 해양관광·레저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혁신성공사례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개회식

혁신적 포용, 새로운 해양수산과 자립적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는 지역 해양수산의 열린 광장으로 자리잡아

- 2019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안과 혁신아이디어 등을 모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국가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활용함

■ 혁신적 포용성장이 새로운 해양수산과 자립적 지역발전의 마중물로 활용

- 2019 대토론회를 통해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고 지역의 도약을 위한 자립적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인구감소 위기,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을 살펴보고 해양수산과 혁신적 포용과의 접점을 시·도의 해양수산 혁신사례를 통해 보여줄 것으로 기대됨

혁신·공존·상생의 현장감 있는 정책 발굴 및 공유 기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연안·해양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정책소통 적극 추진

- 74개 연안 시·군·구의 성장 잠재력이 지역경쟁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중앙·지방의 정책협업을 통한 국가 해양수산 정책을 추진함

■ 해양수산부는 미래를 향한 혁신·공존·상생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 양식 등 전 분야의 스마트화를 통한 혁신성장에 노력하고 있음

- 지역 혁신성장의 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어촌정주환경 개선, 지역 관광 자원의 적극 활용, 청년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2019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중앙과 지방이 연결하여 현장감 있는 정책 발굴 및 공유를 위한 새로운 장이 되길 기대함

해양의 알 권리를 위한 공평한 기회 보장 필요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 바다를 접할 공평한 기회 보장과 내수면 지역발전 전략 추진 필요

- 충북은 내수면 민물고기 연구개발, 양식시설의 스마트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등, 내수면 산업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에 바다를 접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수산 균형발전과 바다에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와 계층 등을 위해 바다를 알 수 있도록 과감한 지역투자가 필요함

새로운 상상과 혁신의 해양수산 지역발전모델 마련해야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다양한 지역사업의 현명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상상의 해양수산 지역혁신 추진

- 바다어촌·섬은 농촌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지역경제 쇠퇴 등의 문제를 겪는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해양수산의 경제적·생태적·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로 재인식됨
- ‘농촌 유토피아 프로젝트’와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역활성화와 새로운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동일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연계·협력하여 상생의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상과 혁신의 해양수산 지역발전모델을 기대함

해양수산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결집의 시너지 창출

김선기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

■ 지역 해양수산 발전정책의 공동 기획을 위한 전국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역 맞춤형 해양수산 발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물적·인적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연구협력의 네트워크와 구심점이 필요함
- 시·도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상시적 연구협력체계는 매우 긍정적으로, 현재 연구협력체계를 지역 해양수산 발전정책 등을 공동 기획하는 등 전국 연구협력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함

사진 1. 2019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전경



개회식 현장



주요 참석자

특별강연: 국가균형발전정책 비전과 전략

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분권 · 혁신 · 포용, 국가균형발전의 3대 가치 실현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은 경기둔화와 인구절벽 ·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더욱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수도권 지역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49.6%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1,000대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률은 73.6%, 수도권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국의 81%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과 소비력 집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92.5%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해당하며, 30년 이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9%가 소멸위기인 지역으로 나타나는 등 비수도권의 지역공동체 붕괴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 현 정부는 분권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역량을 축적하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포용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 도모

-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의 3대 가치인 분권·혁신·포용은 과거 중앙주도의 국가발전에서 나아가, 지역이 주체가 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져옴

사람 · 공간 · 산업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비전 설정

■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선포하고, 사람 · 공간 · 산업 전략으로 구성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 “사람” 전략으로는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SOC 확충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발굴함

- “공간”의 경우, 지방중소도시의 회생을 목표로 한 도시재생과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주요 전략과제로 설정함
- “산업” 전략에서는 지역 주력산업의 활력제고와 지역별 특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산업 활력제고 특별법」, 「규제자유특구법」 등을 제정·추진함

■ 해양수산 부문은 공간·산업 전략 차원에서 ‘활력 넘치는 어촌조성’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서지역 재창조’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실천과제 구체화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 중 해양수산 부문이 주력하는 실천과제는 ‘활력 넘치는 어촌조성’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서지역 재창조’에 있으며, 주요 실천과제 추진을 위해 어촌소득복지, 수산혁신성장, 연안도시의 지역경제 거점화, 해양관광산업 육성 등을 세부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분권·혁신·포용의 가치구현 정책 추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시즌2, 지역발전투자협약, 생활 SOC 사업, 균형발전총괄지표 등으로 분권·혁신·포용의 가치를 투영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요 추진과제는 (1) 균형발전 프로젝트, (2) 국가혁신 클러스터, (3) 혁신도시 시즌2, (4)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협약), (5) 생활 SOC 사업, (6) 지역혁신 거버넌스, (7) 균형발전총괄지표 및 차등지원제도 개발, (8) 한반도 신경계지도와 접경지 균형발전, (9) 균형발전 국제협력 정책네트워크 강화임

■ 해양수산 부문에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 수산혁신 2030 계획, 해양레저·관광 육성, 해양산업 클러스터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사업 활성화

- 해양수산부의 정책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생활 SOC 3개년계획,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성, 지방분권형 지역발전투자협약, 균형발전총괄지표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서 정체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 연안·도서 일대 소외된 지역의 발전과 지역간 협력에 기반한 클러스터·관광산업 육성은 분권·혁신·포용의 가치를 반영한 대표적인 해양수산 부문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주목해 볼 수 있음

제1부. 혁신적 포용, 해양수산의 대도약

발표 1.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성장 정책방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 단장

혁신적 포용국가, 정의사회 구현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 포용성장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의 필요성 제기

-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주의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이 낳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 이후 사회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기조가 등장함
- 최근 소득분배의 악화와 교육격차 확대, 노동시장의 임금격차 심화, 세대갈등 격화, 청년노인 자살률 증가, 저출산 심화 등의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짐
- 현 정부는 주요 정책기조를 경제정책에서 사회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2018.9.11.)」을 발표함으로써 사회통합 강화,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인적자본의 혁신능력 배양과 구현을 도모하고 있음

■ 포용성장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로 구체화, 경제·사회를 포괄하는 정책범위의 저변 확대 시사

-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은 혁신역량을 키우고 기술혁신의 결과인 사회적 배제를 보완해 주는 등 혁신(Innovation)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님
- 현 정부는 출범 초기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서 나아가 혁신에 기반한 포용국가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요 정책기조로 설정함으로써,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을 넘어 경제·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회정책으로의 국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포용국가의 비전인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역량·고용·소득의 선순환을 통해 사람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사회의 질적 변화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 포용국가”는 정치, 사회, 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 기본권리,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보장하며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를 확장하는 국가”를 의미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에 따른 포용성장의 결과가 포용복지라고 강조하며, “포용복지는 경제성장의 과실로서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도록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위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복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혁신적 포용국가의 방향은 지역과 계층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통합·빈곤극복·기화균등 사회를 지향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은 계층, 세대, 지역, 성별, 소득, 학력, 문화적 배제를 극복하고,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공평과 공정을 추구함으로써 누구나 경제·사회적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발표 2. 어촌사회 혁신과 삶의 질 제고 방안

박상우 KMI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어촌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SOC 확충 등 시급

■ 교육, 의료, 문화여가 등 어촌사회의 생활SOC 부족 등으로 삶의 질 만족도 낮아

- 어촌사회는 인구규모의 과소화와 국토의 외곽에 입지하는 특성 등으로 인해 농촌, 도시지역에 비해 삶의 질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건·복지, 안전, 교육, 문화여가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함
- 특히,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농어촌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폐교는 총 327건으로 이 중 어촌지역은 61건(19.0%)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30~40대의 젊은 층 인구유입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어촌지역의 의료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부인과, 조산원은 도시지역의 0.5%(7개소), 안과는 1.5%(23개소)에 불과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이 외에도 섬지역 해상교통과 어업작업 안전재해에 따른 어업인력 손실, 연안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문제 등 정주여건과 안전분야에 대한 개선의 시급성이 제기되었음

■ 생활SOC 확충, 소득일자리 창출, 안전재해 예방을 통해 어촌사회의 삶의 질 제고

- 첫째, 2019년부터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으로 어촌사회의 열악한 생활 SOC 확충·정비에 앞서 주민주도의 현안문제 발굴과 해결을 통한 지역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어촌지역 생활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최저기준(안)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함
- 둘째, 어촌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촌계, 지구별수협 등 공동체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고,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기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을 어촌사회로 유입해야 함
- 셋째, 소외되었던 내수면 어업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강마을 활성화사업’을 통해 내륙어촌과 해면어촌을 연결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함
- 넷째, 주민이 주도하는 어촌개발방식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어촌 6차산업화 등 지역사회의 역량과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야 나가야 함
- 마지막으로 어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발생하는 어업인력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가선주책무 강화, 예방교육 의무화, 교육대상 확대, 전문기관 도입 등 관련 법제도 개선과 어업재해 안전기술개발(개인보호장비, 장비·환경개선)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함

발표 3. 상생과 혁신의 해양수산 초광역경제권 구축

최지연 KMI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지역 공동번영과 해양수산 혁신 시너지 창출을 위한 초광역경제권 구축과 이행체계 필요

■ 세계화의 진전과 저성장의 고착 등으로 지역 주도의 초협력 경쟁사회 진입

- 국가간 경쟁체계에서 지역간 경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해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경제·산업, 문화 등의 경계를 초월한 초협력의 공간재편이 진행 중임
- 중국은 해양경제의 균형발전, 해양 지역혁신 증진, 일대일로 연계추진 등을 위해 북부·동부·남부해양 경제권을 구축하였고, 외레순지역은 통합항만물류체계 구축과 외레순대교 건설을 통해 초국경 협력체계를 완비하고, 다층적 거버넌스 구성·운영을 통해 상생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

■ 연안·해양자원과 지역발전 역량을 결합한 해양수산 초광역경제권 구축 필요

- 세계수준의 항만·물류경쟁력, 청정한 해양수산 자원, 다양한 해양레저·관광자원과 해양수산 관련 지역 인프라와 지역산업 등을 결합해 규모의 경제 실현, 지역주도의 해양수산 혁신가치 창출, 지역간 연계·협력의 상생과 혁신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6+1 해양수산 초광역경제권 구축을 주장함
- 해양수산 초광역경제권은 지역경제의 공동번영, 해양산업·인프라·비즈니스의 다층적 협력가능성, 해양문화생태의 동질성, 연안·해양·섬·어촌의 생활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고려해 설정해야 함
- 우리나라 해양수산 초광역경제권을 공존경제해역권, 환황해연계해역권, 섬·新경제해역권, 동북아거점해역권, 심해·북방해역권, 청정·평화해역권, 내륙해양영토권으로 구축이 필요함

■ 해양수산 초광역 경제 프로젝트 마련과 지역주도의 광역 해양수산발전체계 마련

- 글로벌 해운조선 비즈니스 허브, 동북아 초광역 수산경제권 구축, 동아시아해 크루즈 관광회랑 거점 구축, 선박·항만기인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공동행동, 초광역 해양수산 혁신플랫폼 구축 등 초광역 해양경제 프로젝트 구상 및 이행 추진이 필요함
- 지역주도의 광역 해양수산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수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혁신성장을 명시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근거마련이 필요함

제2부. 지역, 해양수산 혁신의 핵심 축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해양 쓰레기 제로화 대책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국장

■ 주민주도형 섬 재생사업으로 섬 생태자원 회복 및 섬 문화 관광 자원화

- 과거 대규모 시설투자와 섬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통한 행정주도의 사업진행으로 섬의 경관 훼손과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계가 있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4개의 섬에 5년간 40억을 투자하여 섬 고유 생태·자연·문화·역사 등을 회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함
-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단계별로 지원하여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섬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섬의 생활 SOC 기반시설과 섬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5년 후에는 주민중심의 섬 발전기반을 마련 함
- 추진성과는 여수 낭도, 강진 가우도, 고흥 연흥도 등 우수사례를 발굴 및 섬 관광객이 27만명('14년)에서 106만명('17년)으로 약 5배 증가하였고, 18년 상용 일자리 11개, 임시 일자리 74개를 발굴함

■ 전라남도 특성을 고려한 해양쓰레기 관리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해양쓰레기 제로화 대책 마련

- 전라남도 연안은 해안선이 길고, 도서 등의 다양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연안으로 유입되는 부자, 부표, 스티로폼, 양식 기자재 등으로 인해 해양쓰레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음
- 전라남도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고, 전라남도 바닷가환경 관리 및 보전 조례를 제정하여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대책을 수립,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조성에 힘쓰고 있음
- 기본적으로 자정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통합매뉴얼 개발, 어업인 교육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확대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선상 집하장에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노력함

해상교통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섬 만들기

윤석관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 과장

■ 해양교통 운임지원 확대를 통해 섬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인천의 섬은 해상교통 수단 부족과 높은 여객 운임 및 여객의 잦은 결항으로 접근성이 불편하고, 섬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서해 5도지역은 접경 지역으로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으로 빠르게 낙후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시는 해상교통요금을 육상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고, 명절 연휴 기간에 이용운임 전액을 지원, 타시도민(50%), 군인(70%) 및 출향민(70%)에게 여객 운임을 지원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인천연구원의 2017년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객 운임지원 사업은 여객이용자를 22.8%증가시키고, 직접효과 4.2배, 간접효과 11배의 높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산 수산업·어촌 혁신 2030계획

배병철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물국 국장

■ 부산 수산업·어촌 혁신 2030계획을 통해 어촌인구 고령화, 수산업 경영악화,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정체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마련

- 부산의 수산업·어촌은 도시화에 따른 어촌 고유기능 쇠퇴, 어촌인구 고령화, 선망 등 대형어업의 어획고 감소, 부산어목을 제외한 수산물 유통·가공업 정체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음
- 민선 7기 新 수산정책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업인과 수산단체의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부산 수산혁신의 핵심정책 4개와 세부과제 16개를 마련함
- 부산시는 핵심정책으로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공존과 상생의 풍요로운 문화어촌조성,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한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4차산업 혁명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어업인 소득 및 수산산업 매출액, 글로벌 수산 기업, 수산물 교역액 등을 2배 향상시키고, 수산물의 생산량을 26만 톤에서 29만 톤으로 향상시키는 지표를 발표함

어촌 고령화에 대비한 상생형 귀어 시스템 구축

박정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국장

■ 어촌계 고령화, 어촌계 진입장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촌계 연금제도 도입

- 충청남도는 169개의 어촌계가 있으며 마을어장·맨손어업 중심으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충남 소재 어촌은 고령화(47.4%) 및 어가 인구의 감소(연평균 어가인구 성장률 -3.5%)로 인해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
- 따라서 어촌-어민의 상생 발전과 어촌 내부의 혁신을 위하여 귀어·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주택구입 지원, 청년어촌 정착제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등이 있음. 그 결과 충남은 전국 귀어 가구의 36.2%(42가구)를 차지하는 등 성공적인 혁신사례로 자리 잡았음
- 이와 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기존 어민들과 귀어인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어촌의 문제를 중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귀어인들은 교육기간의 소득 부재, 동료 귀어인과의 교류 부족, 어업계 진입장벽(가입비, 거주기간) 등을 호소하고 있음
- 충남도 또한 귀어인의 정착은 향후 어촌리더를 육성하는 큰 기회임을 인지하고 “어촌계 업무복지 제도”를 통해 어업계 수익을 일정 부분 귀어가족의 소득 보장 및 정착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1차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귀어인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음

어촌경제 위기, 해양레저관광으로 극복

변성균 강원도 환동해본부 본부장

■ 강원도 고유의 해양·어촌 자원으로 매력있는 관광상품 개발

- “어촌 소멸”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어촌이 겪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대책 강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강원도는 동해안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30개의 사업을 발굴, 해양레저관광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는 양양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핑메카 조성” 사업이 있음. 양양 지역의 지리적인 환경이 서핑을 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임이 서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죽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젊은 층이 모여들기 시작했음. 이에 따라 강원도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핑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이 서핑산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행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현재는 사계절 지속가능한 관광객 유입과 서핑의 대중화를 위하여 인공서핑장 설치, 방송매체와의 협력 등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 어촌체험마을 또한 강원도 해양관광을 진흥시킨 하나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수립 과정에서 젊고 관광트렌드 파악에 능한 귀어인들이 주도하여 수요자 중심·지역별·마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게 했고 전문 인력의 자문을 통하여 4계절 운영이 가능한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함

충북, 내수면에서 미래를 만나다

이상혁 충청북도 농정국 국장

■ 농·어업 부산물의 순환적 연계로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

- 충북은 우리나라에서 바다가 없는 유일한 내륙도임. 그러나 낚시관광과 내수면 어업 등으로 충북이 수산업에서 갖는 입지와 잠재력은 크다고 생각함. 내수면이 갖는 친화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의 소득 창출과 복지 확대를 고민하는 것이 충북 수산정책의 주된 기조임
- 충북 수산정책에서 혁신사례로서 농·어업 융·복합사업(아쿠아포닉스)를 제시하고자 함. 아쿠아포닉스는 어류양식과 수경재배를 합친 합성어로서 양식으로 얻은 물고기의 분비물을 채취·여과를 거쳐 식물재배의 영양분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함. 충북에서는 농업에 함께 종사하는 어업인이 많으므로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은 농어업을 한 지역에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혁신이라고 생각함. 현재 아쿠아포닉스 사업을 위해 충북 진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공급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양식장 유기폐기물 처리에 혁신을 담다

정영권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과장

■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어의 혁신적 처리로 해양환경 보존

- 일반적으로 기르는 어업(양식)은 잡는 어업(어로)보다 환경·자원보존·관리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나 실제로 양식업은 한정된 지역에서 어류 관리가 시행되어 양식장 주변 환경, 질병 등의 요인에 취약한 면이 다수 존재. 특히 태풍, 적조,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함. 경상남도는 양식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사어류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기는 중에 있음

- 2018년, 경상남도는 하동군을 “양식생물 폐사어 친환경 처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 해상작업대에 폐사어류를 처리하는 기계를 설치하였음. 해당 기기는 미생물의 발효·소멸을 통하여 어류를 비료로 분해하는 처리방식을 사용했으며, 하루 평균 99kg의 처리능력을 가짐
- 2019년에는 해당 사업을 확산시켜 44개의 기계를 설치하고 급등하는 어업인의 수요에 맞추어 추가 기계를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임. 기기는 시범사업에서 소개된 미생물 발효·소멸 방식과 함께 미생물 발효·건조 방식, 가열·건조 방식 등으로 다각화하고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신고 방법에 맞추어 관련부처와 협조를 진행하였음. 폐사어류를 이용하여 제조된 비료는 필요한 농가에 공급되고 있음
- “양식장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보급”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폐사어류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처리가 가능해짐. 이에 따라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유기폐기물이 85~95% 감소하고 이와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는 폐수약취 문제를 해결하였음. 본 혁신사례의 발표를 통하여 어업인의 자율처리수단을 확산하고 양식장 내의 자동화·스마트화를 통해 폐사어 조기 감지 등의 신속 처리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고군산군도 명품마을 만들기

길해진 전라북도 농축수산물식품국 해양수산정책과 과장

■ 어촌뉴딜 300 사업과 연계한 주민주도형 고군산군도 명품마을 조성

- 고군산군도는 12개의 유인도와 24개의 무인도로 구성, 2,6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2017년 고군산 연결도로(신시도~장자도)의 개통으로 군산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음. 이에 따라 육지와 연결된 도서의 통합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명품마을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 고군산군도 명품마을 만들기사업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인 기본 인프라 구축에서는 관광단지 및 어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임. 대표적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무녀2구항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과 광역 해양테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이 있음
- 2단계인 고군산군도 명품마을 육성사업은 마을리더·주민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총괄기획자를 선정, 마을별 소규모 사업추진계획을 공모 받아 2021년까지 명품마을 1개소를 선정할 예정임. 이를 통해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군산군도에 소재한 각각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 주민밀착형 SOC 개선, 소득 창출 등의 효과를 달성할 계획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선진형 모델 구축

이기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과장

■ 전국 최초 “해양환경지킴이” 제도 도입으로 효율적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 제주도는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 잡음. 그러나 해안도로와 올레길 등에 해양쓰레기가 노출되면서 “청정제주관광”이라는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 제주 연안은 주요 해류가 지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중국·일본 등 국적을 가리지 않는 해양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음.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전통적인 제도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제주도는 “해양쓰레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하고, 생산적인 바다”라는 비전 아래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정제주바다지킴이」 제도를 도입함. 기간제 근로자 152명이 2월 발대식을 갖고 제주 본도 및 8개 유인도서로 배치,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 체제를 구축하였음. 더불어 해양쓰레기 수거 인프라 시설로서 전문 운반차량과 집하장을 설치하고 해안변 방치시설 및 초소 등을 철거하여 경관 복원 사업을 동시에 실시함. 향후 「청정제주바다지킴이」 제도는 「해양환경미화원」 제도로 정비하여 정규직화하고 상시전담팀을 운영할 계획
- 해양쓰레기는 쓰레기 내의 염분처리 등으로 인해 일반 쓰레기보다 5배가량 많은 처리비용이 발생함.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 이후 처리를 위한 법안이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제주도가 깨끗한 관광지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제도 개선이 절실함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계획

심민령 울산광역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과장

■ 세계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시도로 독자적 기술 마련과 해양공간 활용 재발견

- 울산은 과거부터 풍력 발전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초기에는 육상풍력 장치를 산 정상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주민들의 민원과 재산상의 문제로 사업을 보류하였음. 이후 울산에서 채굴하는 가스전 일대가 지리적, 경제적 여건에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진 것으로 파악됨. 강한 풍속(평균 풍속 8m/s)과 주변 산업시설을 여건으로 전기의 생산과 송배전에 저렴한 비용이 들고 깊은 수심으로 부유식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음

-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은 “투 트랙(Two Track)” 전략으로 진행 중에 있음. 하나는 국가와 울산시가 주도하여 부유식 해상풍력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시키는 것임. 사업 초기에는 750kW 수준의 중형 해상풍력 플랜트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제작·운영하여 실용성과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이후에는 5MW급 대형시스템을 설계·개발하여 한국만의 풍력발전의 고유기술을 획득함
- 두 번째 전략은 민간주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외 해상풍력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맺고 투자하며, 공공기관이 행정지원과 투자자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단계로 진행할 예정임.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1GW 이상의 대규모 발전단지가 건설되어 울산 시민에게 전기를 공급할 예정임
- 본 사업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점과 해양공간의 인식을 조금 더 대륙과 떨어진 곳까지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본 사례를 통해서 해양공간 활용을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함

문무대왕 선양을 통한 동해정신 정립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

■ 동해의 다각적 분석을 통한 해도(海都) 경북으로 도약

- 경상북도는 5개의 시·군이 동해와 접하고 있으며 강원도보다 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음. 경북은 이전까지의 내륙 위주의 발전을 탈피하여 환동해지역본부의 포항청사 건립을 통해 해양중심의 발전정책을 구상하고 있음. 환동해지역본부는 경북 해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며 독도 수호, 원자력 발전소의 관리방안 마련 등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기관으로 성장함
-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은 “동해학”을 정립하는 것임. 동해가 경상북도에게 주는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 동해의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기르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동해의 인문사회학적 가치를 연구하는 「동해역사박물관」과 「경북 근대항만 100년 재조명 사업」, 동해의 해양과학적 의미를 발견하고 해양과학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2020년 개관)」 등이 있음
- 환동해산업연구원(구.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의 개칭으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접목, 해양과학교육의 고급화, 문무대왕 정신 계승을 위한 각종 학술연구 및 해양대상 시상 등 경북의 해양력(海洋力)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구성하는데 노력할 예정임

사진 2. 사·도 해양수산 혁신사례 발표 현장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양근석 국장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윤석관 과장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배병철 국장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박정주 국장

강원도 환동해본부 변성균 본부장

충청북도 농정국 이상혁 국장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정영권 과장

전라북도 농축수산물국 길해진 과장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이기우 과장



울산광역시 혁신산업국 심민령 과장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김남일 본부장

혁신사례 발표 현장

열린 대담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김선기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현장 중심 해양수산 지역혁신과 미래의 포용어촌 조성

■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현장중심의 어촌문제 해소와 해양수산 지방분권 추진

- 해양수산 혁신사례를 살펴보면 어촌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현장에서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앙정부는 현장의 답을 배워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예산구조가 하향식인 국고보조금 사업, 공모식 사업 등은 미래에 당면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중앙정부는 아젠다와 목표만 제시하고, 목표하에 지방이 실정에 맞는 구체적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어촌관련 사업 역시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되 지역주도로 추진해야 함
- 또한,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할 인재육성이 필요하며, 충남에서 사례로 발표한 어촌계 인턴제 같이 기존주민과 융합하면서 어촌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인재양성 모델이 필요함

■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광역경제권 종합계획 추진과 지역리더의 해양수산 기획역량 강화

- 1차산업에서 2차가공, 3차산업인 관광까지 연계한 일자리 창출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혁신리더의 양성과 유치가 앞으로 어촌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귀농어·귀촌 인구를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농촌과 어촌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으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체계도 필요해 보임

-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어촌이나 해변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생산기술에 적용하여 효율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미래의 지역사업은 지역 스스로가 발굴하고 중앙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사업기획역량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시적 사업발굴 및 기획시스템 구축이 필요

■ 김선기 회장, 해양수산 지식공유 네트워크 구축과 어촌현장연구 강화

- 해양수산 분야에 시도, 중앙정부,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다양한 이슈의 연구들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어촌뉴딜300, 수산혁신 2030과 관련하여 시도연구원과 지속적인 공동연구 추진이 필요함
- 어촌은 80% 이상 고위험 소멸위험에 속해 있어 국민이 인식하는 것과 현실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촌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어촌지역은 사업의 계획수립과 추진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선진사례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해양수산개발원과 시도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성공사례집 등의 발간을 통해 관련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현장포럼’과 같이 어촌실태 파악, 발전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현장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어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김태완 연구위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의 질 향상 필요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삶의 질 3가지 주요요인으로 판단되는 환경, 건강, 빈곤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어촌의 경우 깨끗한 환경, 건강한 지역주민, 관광을 통한 소득창출의 연결고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지역의 고령화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이 도시로 떠나지 않도록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젊은 세대를 위한 IT산업 기반의 다양한 직종개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확대시켜 외부 젊은 인력을 유입시키도록 해야함
- 또한 어촌지역의 안전 및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 양창호 원장, 바다를 이용한 혁신사업이 미래 지역성장의 중요 수단임을 강조

- 바다와 관련된 산업은 수산식품산업, 관광산업, 스마트 항만, 항만배후산업 등 매우 다양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혁신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것이라 생각함
- 해양수산 산업들은 바다와 연안, 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연구원도 국토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시도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지역현안의 지속적인 발굴 및 혁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예로, 선박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도서간 교통문제 해결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의 추진이 필요함

사진 3. 열린 대담 현장



시사점

■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지역혁신체계로 지역현안과 발전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천

- 2019 대토론회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KMI의 지역혁신체계로 지역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자리 매김함
- 이번 대토론회는 11개 사도의 해양수산분야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연구자가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혁신방안을 논의함
- 2019 대토론회는 해양수산의 지역현안과 발전방안을 공유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역혁신체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혁신적인 포용국가 실천과제로 섬과 연안·어촌의 열악한 삶의 질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생활 SOC 확충과 국가적 최저기준 마련 필요

- 어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전체 어촌의 80% 정도가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교육, 문화여가, 의료, 정주여건 등에서 열악한 여건으로 삶의 질 만족도가 농촌,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어촌뉴딜 300사업 등 생활 SOC 확충을 위한 마중물 기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최저기준 마련과 주민 주도로 현안발굴과 개선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장중심의 혁신사례 발굴을 통한 국가정책 수립과 지역사회의 혁신적인 역량강화 필요

- 2019 대토론회는 사·도 해양수산 혁신사례 발표를 통해 열악한 섬지역의 지역 활성화(전남, 전북), 해상교통 개선(인천), 어촌특성을 고려한 귀어시스템 구축(충남),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제주) 등이 제시됨
- 이번에 제시된 해양수산 사·도 혁신사례는 국가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선도적인 대안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해양수산 정책 등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또한, 지역주도의 혁신사례에서 제시된 정책과 추진과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지역주도의 혁신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한 이번 대토론회는 전국 지자체와 관련 연구기관에 모범 사례(Good Practices)로 인식되었고, 차년도 대토론회에서는 더 다양한 현안과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양수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KMI와 관련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발굴 및 확대 추진

- 2019 대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해양수산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시도연구원, 관련 국책연구원 간 공동연구 발굴과 수행을 위한 발판이 되었음
- 특히, 해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간 부처 협업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공동연구 등을 통한 부처간 협력정책 공동기획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첨병!,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구분	제목	발간일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구분	제목	발간일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제67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2호	우리나라 정가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회갑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벙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URL: <https://www.kmi.re.kr/>